



제 **4** 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4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재직 중에는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퇴직 후 업체에 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I

취업제한제도 개요

취업제한(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가능
※ 공직자윤리법 개정(공포 2014.12.30., 시행 2015.3.31.)

- ❖ 취업제한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부터 3년간 ☞ 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
- ❖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준
 - ☞ 2015.3.30. 이전 퇴직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만 판단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특정기관 1급 포함) :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 3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징수, 계약, 법령상 감독, 사건수사 및 그 밖에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 등에 관계된 업무 여부
- ❖ 취업제한기관
 - ☞ 2015.3.30. 이전 퇴직자는 시장형 공기업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 일정규모·범위에 해당하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과 그 설립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 위반자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2015.3.30. 이전 퇴직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 취업의 범위

-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봄(법 제17조제4항)
- 이와 같이 공직자윤리법 상의 취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하되 그 실질에 있어 취업의 해당하는 경우까지 취업으로 간주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1795 판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전속성·대체성 여부 및 그 정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2. 취업제한요건(법 제17조제1항)

아래 ①항부터 ③항까지 모두 충족하면 취업심사대상이 되고, 거기에 ④항이 해당되면 취업이 제한되게 됨

- ①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일 것
-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일 것
 - ※ 2015.3.30. 이전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 이내로 적용
- ③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될 것
 - ※ 2015.3.30. 이전 퇴직자가 시장형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기관에서 적용 배제
- ④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 ※ 2015.3.30. 이전 퇴직자는 소속하였던 부서기준으로만 업무관련성 판단



3. 취업제한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법 제3조, 법 제17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특정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 (특정분야) 감사·경찰·소방·조세·검찰·국방계약·건축·식품위생·금융감독·원자력 발전 등

참고 질의·응답

1. 재산등록 의무면제자로서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제도 적용은?

- ▶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직위로 전보 또는 전직된 경우의 의무면제자는 1차 의무면제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고 퇴직하였더라도 의무면제일 기준으로 취업제한기간인 3년(2015.3.30. 이전 의무면제자는 2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2.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 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대상 여부?

- ▶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여 퇴직일부터 3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체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비위면직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과 중복 적용

3. 5급에서 4급으로 명예퇴직한 자의 취업심사대상 여부?

- ▶ 임용통지서 상의 퇴직일에는 4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원 신분은 퇴직일 전날 24:00까지만 유지되고 그때는 5급이므로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업심사대상이 아님

※ 공무원 면직시기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일이 기재된 일자의 영시(00:00)부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판결(대법원 1985.12.24. 선고 85누531 판결)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별표1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서 명예퇴직자의 경우는 명예퇴직 전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로 계산



참고 질의·응답

4.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여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으나 재산등록기간인 2개월 이내 퇴직하여 재산등록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자의 취업심사대상 여부?

- ▶ 법 제17조제1항에서 취업심사대상자는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직자의 재산등록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자이면 취업심사대상에 해당함

4.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부터 3년간(법 제17조제1항)

※ 2015.3.30. 이전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 행정소송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서 제외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정지됨 (법 제19조제3항)
- 다만, 취업제한결정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 진행

참고 질의·응답

1.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일 전에 퇴직한 사람도 취업제한기간 3년이 적용되나요?

- ▶ 2014.12.30. 공포된 개정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개정된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2015. 3. 31. 시행되었음
- ▶ 따라서 법 시행일(2015.3.31.) 이후에 퇴직한 공직자부터 취업제한기간 3년, 확대된 취업제한대상 기관(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등 관련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취업이력공시제도 등 강화된 취업제한제도가 적용됨
- ▶ 그렇다면, 2015.3.30. 이전에 퇴직한 공직자는 강화된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업제한기간 2년 등 본인이 퇴직할 당시의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음



5. 취업제한기관

가. 취업제한기관 및 그 규모·범위

(1) 영리사기업체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법 제17조제1항제1호, 영 제33조제1항제1호)

(2) 협회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그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조합 등(법 제17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뿐만 아니라 기타 사유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 모두 포함되며 명칭상 협회·조합에 한정되지 않음

- 영리사기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합명·합자·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것은 협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가입과 출자 비교

구분	가입 관련	출자 관련
설립목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 자격을 가지고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영위 등 영리 추구 (배당이익, 경영참여 등) - 출자 지분에 한정해 권리·의무(유한책임) 발생
설립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등	상법(각종 회사) 등
법해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석상 ‘출자’의 경우도 출자자들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법문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가입의 범위에 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하여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 특성을 고려할 때 법 규정 내용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할 필요 	
참고사항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로 지정 관리	



(3) 법무법인등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법 제17조제1항제3호, 영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4) 회계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법 제17조제1항제4호, 영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5)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법 제17조제1항제5호, 영 제33조제1항제3호)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법 제17조제1항제6호, 영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 헌법기관의 취업제한기관 규모 및 범위('15.5. 현재)

- 국회(규칙 제25조제1항)
 -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
- 대법원(규칙 제34조제2항) 및 헌법재판소(규칙 제19조제4항)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2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의 관계규정을 준용

(7) 시장형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 2015년도 시장형 공기업 지정현황(기획재정부, 2015.1.29.)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총 14개)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법 제17조제1항제8호, 영 제33조제3항)

○ 안전감독 업무

－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관리·지도·단속 업무

○ 인·허가 규제 업무

－ 법령에서 정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검사·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

○ 조달 업무

－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 포함)

※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 고시, 2015.3.31. 157개)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총157개)

(9) 사립대학과 그 설립학교법인(법 제17조제1항제9호, 영 제33조제4항)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인사혁신처 고시(2015.3.31.) : 656개(사립대학 등 352개, 학교법인 304개)

대학 : 가톨릭대학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등 (352개)
 법인 : 학교법인 이화학당,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등 (304개)



-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

(10) 종합병원과 그 설립법인(법 제17조제1항제10호)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인사혁신처 고시(2015.3.31.) : 468개(종합병원 330개, 의료법인 101개, 비영리법인 37개)

종합병원 :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등 (330개)
 의료법인 : 의료법인 삼성제일의료재단, 길의료재단 등 (101개)
 비영리법인* : 국립암센터,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37개)

* 비영리법인 중,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과 중복되는 법인은 제외

(11) 사회복지법인 등(법 제17조제1항제11호, 영 제33조제1항제4호)

-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 인사혁신처 고시(2015.3.31.) : 152개

CJ나눔재단, LG복지재단, 공항공품나무재단,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양친사회복지회, 강원랜드 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참고 질의·응답

1. 취업제한대상 협회의 범위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 ▶ 취업제한대상 협회는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있으나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2월 중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가 그에 해당되며, 취업예정자와 협회와의 업무관련성 판단은 취업예정자와 협회 자체와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관련성 여부 및 취업예정자와 협회 회원사인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함께 판단

※ “협회”는 “협회·조합·연맹·연합회”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기관의 성격상 취업제한 대상 업체가 구성원(회원·조합원·출자자 등)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

2. 취업제한대상에 속하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협회 성격의 공직유관단체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 ▶ 취업제한대상 협회의 업무관련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취업예정자와 협회 자체 및 협회 회원사인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등과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함께 판단

3. 사립대학도 취업제한대상 기관으로 추가되었는데 순수학문 연구를 위해 평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 사립대학의 교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직위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됨
- ▶ 즉, 민관유착 가능성이 우려되는 총장,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등의 직위(소위 보직교수)에 있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되나
- 순수 학문적 전문성을 살려 대학의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나. 취업제한기관의 확정 및 고시

-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협회는 제외한다)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영 제33조제5항)

※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등은 고시하지 않음(협회의 특성상 그 설립과 폐지가 빈번하고 사기업체의 가입 여부도 유동적이며 협회 등의 정관 개정 등으로 변경이 용이하여 별도의 지정 고시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 다음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에 각 취업제한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영 제33조제6항)

- (국세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봄(영 제33조제5항 단서)
 -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단체
 -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단체
 -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단체

참고 질의·응답

1. 2015년도 적용 취업제한 대상으로 고시된 15,033개의 기관에 대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은 취업이 금지된다는 것인가요?

-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일정 규모·범위의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등 관련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15,033개 기관에 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
- ▶ 취업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3급 이하 공무원 등 적용) 또는 기관(2급 이상 공무원 등 적용)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됨을 의미함
- ※ 바꾸어 설명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함

2.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업체가 연도 중 회사명칭 변경, 사업분야가 독립하여 별개의 법인이 되거나 합병된 경우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자본금, 연간 외형거래액)를 충족하고 있다면 취업심사대상에 해당함



참고 질의·응답

3. 취업할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관보에 고시되어 있지 않아 취업심사 없이 취업하였으나 1년이 지난 후 취업제한대상기관으로 관보에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 ▶ 취업당시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취업심사 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업체가 향후 취업제한기관으로 관보에 고시되더라도 별도로 취업심사는 받지 않아도 됨(법제처 법령해석 08-0358, '08.12.11). 다만,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2개의 업체가 하나로 합병되어 신설법인 성격의 회사로 된 경우에는 자본금·외형거래액이 법령의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참고 2015년도 취업제한기관 현황(15,033개)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4호('14.12.30),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5-2호('15.3.31), 취업제한기관

구분		지정기준	대상기관
영리 분야 (13,586)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13,505개
	법무/회계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24개/29개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28개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협회	영리사기업체(13,505개)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 고시제외
비영리 분야 (1,447)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14개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수행기관	157개
	사립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656개
	종합병원 등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468개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 법인	152개

* 협회를 제외한 모든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



6.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적용대상
 - 3급 이하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를 제외한 자
- ❖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적용대상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적용대상자(법 제17조제2항)

○ 공무원

- 3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업무관련성 판단범위(영 제32조제1항제1호)

○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 포함)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 해당 과의 업무

○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 * 국장은 국 전체의 업무, 실장은 실 전체의 업무

○ 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속하였던 부서에 포함하여 심사



나.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적용대상자(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영 제32조제3항)

○ 공무원

-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재산공개대상자 제외), 2급 이상의 공무원
-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그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고등검찰청 부장검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검찰청의 조직(검찰청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 대검찰청(1), 고등검찰청(5), 지방검찰청(18), 지방검찰청지청(40)
- ◆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9)
 - 부산지검 동부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 공직유관단체

-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
 - *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원전분야), 한전KPS(원전분야)

□ 업무관련성 판단범위(영 제32조제1항제2호)

○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

* 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④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 다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 ②책임운영기관, ③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④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포함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2급 이상과 3급 이하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업무의 범위를 적용

참고 질의·응답

1.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 기존에는 과의 장 및 과의 소속 직원은 해당 과의 업무로, 그 상위 직위에 있는 경우는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 ▶ 개정법에서는 고위공직자(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어 본부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는 본부와 소속기관의 전체의 업무, 소속기관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는 해당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함



참고 질의·응답

2. 광역의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은?

- ▶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상임위원회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성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7.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제5항)

-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봄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 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재정보조 등의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기준·평가항목 등 결정, 신청서 접수·심사, 보조금액 등 확정·지급·정산 및 후속조치(평가·감사)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신청서 등 접수, 인·허가 등을 위한 조건 충족여부 검토·확인·시험평가, 인·허가 등 의사결정, 인·허가 등 관련 사후 관리·감독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검사·감사계획 등 수립,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결과처분 검토 및 결과 처분 통보, 후속조치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계획 등 수립, 대상 업체 선정, 조사인력 편성, 조사, 조사결과 정리 및 확인, 조세의 부과·징수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기본(사업)계획 수립, 규격 등 검토, 제안서 검토·평가,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감독·검사·검수 등), 대금지급, 후속조치(평가·감사 등)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검사·감독 등 계획 수립,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 심리·처분 검토,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감독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경비업법(경찰청) 등

7.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법인·단체 등)과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 조세·특허·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심판·심결 등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 경우

8. 그 밖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영 제32조제2항) >

-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정책 등의 수립·조정·시행·평가·감사·후속조치·제도개선 반영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의 처리

- 정책·사업 등의 검토·결재 또는 안건 검토·심의 등을 위한 회의참석 등의 의사결정 관여

- 검토의견 제출 등 업무처리 협조, 정책건의·반영, 민원처리 등 다양한 형식·



모습으로 특정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업무관련성 간주 규정(법 제17조제5항)

-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로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1호~8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세무법인이 세무사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 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봄

8. 취업제한의 예외

가. 취업승인

(1) 승인내용

-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되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제1항 단서)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취업승인 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을 승인(영 제34조제3항)

(2)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 (제1호)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제2호)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호)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제6호)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제7호)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제8호)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제9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이중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을 승인하여야 함(영 제34조제4항)

- 다만, 제6호의 경우는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에 한함



< 취업승인 직위 채용 사전협의 처리절차 >

- ❶ 취업승인 직위에 대한 채용계약절차를 진행하는 소속기관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채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협의 요청
- ❷ 취업승인 직위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협의결과를 채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❸ 사전 채용협의결과에 따라 채용계약을 체결한 소속기관장은 채용 후 5일 이내에 그 인사발령통지 사본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협의 시 첨부자료

- 채용계약후보자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채용기관의 정·현원 현황, 외부 전문인력 채용현황, 채용공고문 사본, 채용 신원조사 여부, 채용예정부서 및 직위 등을 기재한 자료

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의 동종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음(법 제17조제7항)

※ 자격증 소지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른 분야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예, 변호사 → 회계법인·영리사기업체, 세무사 → 법무법인등)

9. 취업심사시 고려사항(법 제17조제6항)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법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 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 (법 제3항)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법 제5항)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회계법인·세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법무법인등·회계법인·세무법인의 업무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II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1.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승인의 비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승인
개념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조사·판단하여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에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심사 기준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제한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심사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특별한 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 심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②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③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④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⑤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⑦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등 또는 협회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제한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⑧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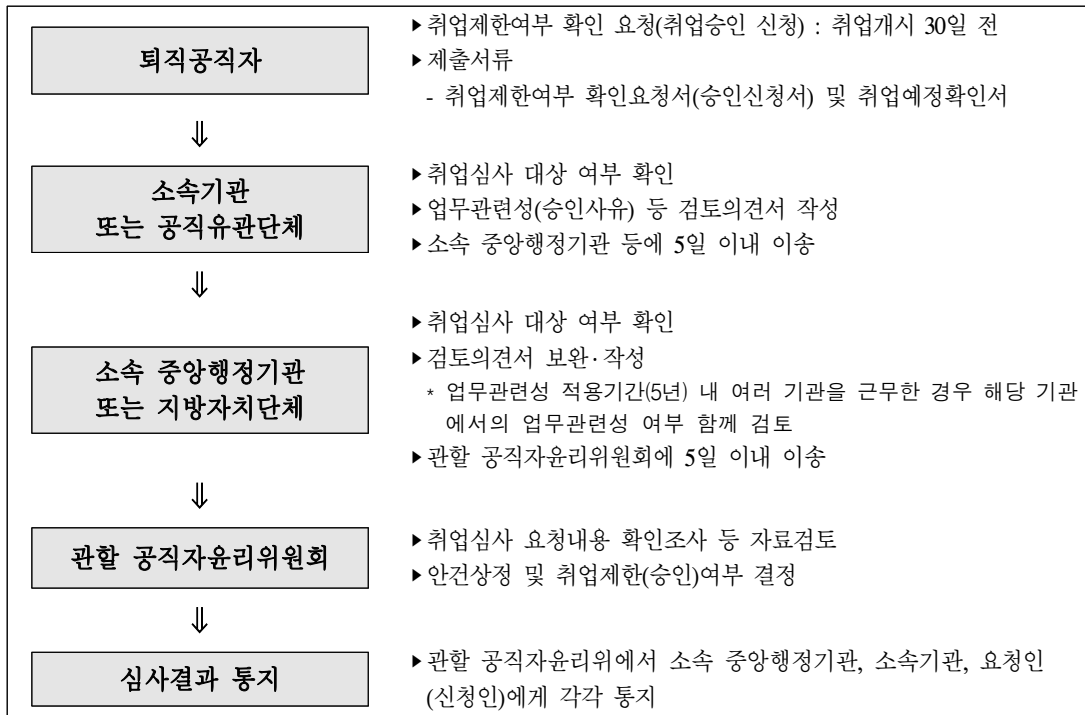


참고 질의·응답

1.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 기관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2.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절차



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 제출

(1) 제출시기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제1~2항)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취업승인신청서)는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영 제33조의2 및 제34조제1항)

참고 질의·응답

1.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심사가 가능한지?

- ▶ 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에서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거나 취업승인을 신청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면서 공직에서 퇴직한 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 ▶ 만약에 현직자에게 심사신청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직 중 업무처리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현직 공직자에게는 취업심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음

2.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의 작성방법에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 등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로 볼 때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심사가 가능한 거 아닌지?

- ▶ 신청서 서식의 작성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의해 전역 예정일이 6개월 이내 있는 군인만 해당됨

* 제대군인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현역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2)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승인신청서)와 함께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발급한 취업예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나. 소속기관장의 확인요청서(신청서) 검토 및 이송

- 소속기관의 장은 확인요청(승인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영 제33조의3제1항 및 제34조제2항)



다.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확인요청서(신청서) 조사·확인 및 이송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사항에 대한 조사·확인 후 이송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영 제33조의3 제1항 및 제34조제2항)
 - 업무관련성 적용기간(5년) 내에 전입, 퇴직 후 재임용 등으로 근무기관이 복수인 경우 해당 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송

라. 심사·결정 사항의 통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심사·결정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 소속 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영 제33조의3제2항)
 - 취업이 제한 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취업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3. 취업제한여부(취업승인)의 검토사항 및 제출서류

가. 확인·조사 및 검토사항(영 제33조3제1항)

- ① 취업심사대상자 및 취업제한기관(협회) 해당 여부
 - ※ 협회는 그 회원사에 인사혁신처장이 확정·고시한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만이 심사대상이 됨
- ②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조사
 - ※ 밀접한 관련성 업무범위(법 제17조제2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③ 취업 후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여부 확인·검토
 - ※ 재직 시 취득한 정보·지식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취업 후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취업제한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인터넷 검색, 취업예정기관의 전임자나 유사분야 퇴직 공무원에 대한 문의 등)



④ (취업승인 신청 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검토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에도 불구하고 취업 심사대상자의 취업을 승인할 만한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세밀하게 검토

나.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취업승인 신청)서
- 취업예정기관(협회) 장의 취업예정확인서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분장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시)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취업승인 신청 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임의취업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시 당해인이 작성한 임의취업 사유서

4. 우선취업제도

가. 우선취업제도 내용

-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고 취업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취업을 하게 한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심사는 추후에 실시함
 - 추후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에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해제 요청함



나. 우선취업 신청

- 우선취업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33조의4제1항)
 -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라야 함

다. 우선취업 신청사유(영 제33조의4제1항 제1~3호)

- 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 ②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 ③ 기타 우선취업이 필요한 경우

라. 우선취업의 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취업을 하게 할 수 있음(영 제33조의4제2항)

마. 우선취업 심사결과의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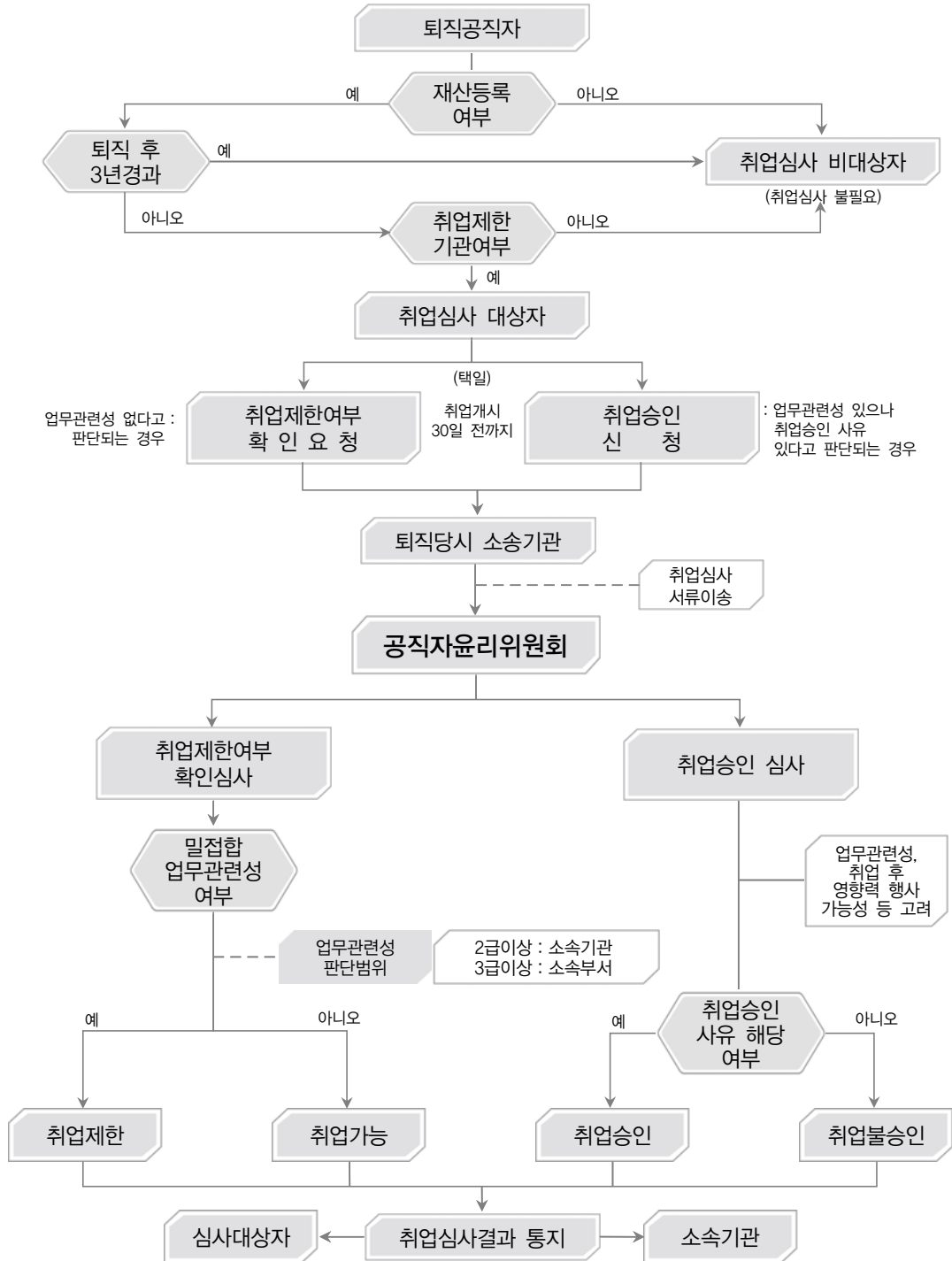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영 제33조의4제2항)

바. 우선취업 신청자의 취업심사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함(영 제33조의4제3항)



참고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Ⅲ

취업여부 확인(임의취업 일제조사)

1. 취업여부 확인 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회 이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법 제19조의2제1항)
- ※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경우 적발

2. 조사방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조회(법 제19조의2제1항)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조회는 취업여부 확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무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2009년부터 인사혁신처(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 시스템을 연계 시켜 일괄 조회한 후 그 결과를 각급기관에 제공(연 2회)하고 있음

3. 조사결과의 보고

- 국가기관의 장 등은 취업여부 확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후 심사 요청
- 취업심사 요청시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 취업제한기관(협회) 장의 취업확인서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사무분장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당해 퇴직공직자가 작성한 임의취업 사유서

4. 자료제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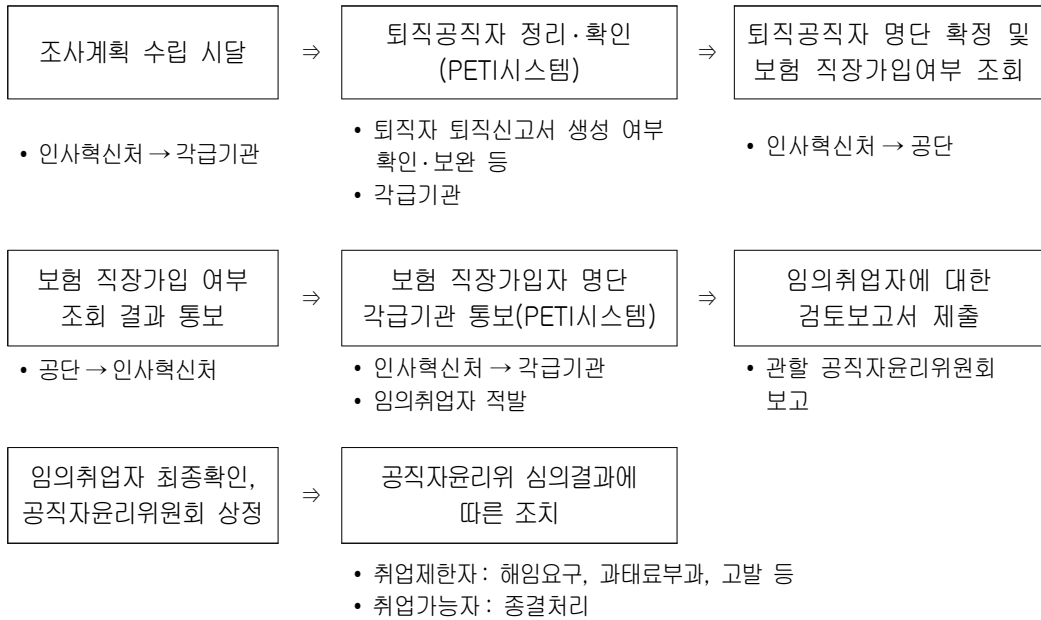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련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함(법 제19조의2제2항)

5. 조사결과 조치

- 임의취업자에 대한 조치
 -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 통보(법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 해제조치를 요청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법 제19조제1항)
- 해임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한 조치
 -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검찰에 고발(법 제29조제1호)
 - 취업제한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대상자 통보(법 제3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 조사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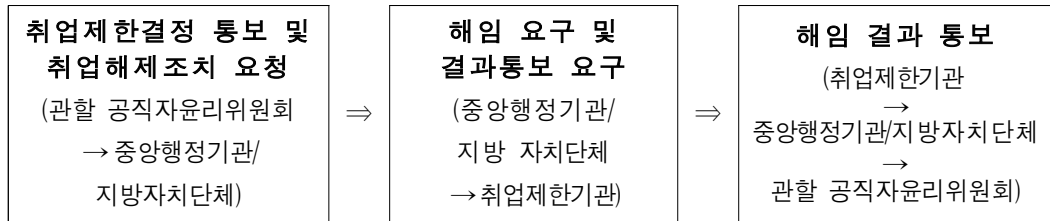


IV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1.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가. 취업해제 조치



※ 해임요구 거부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결정하여 법원에 통보

(1) 취업해제 요청(법 제19조제1항)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¹⁶⁾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

※ 임의취업자 및 우선취업 허가자 중 취업제한 결정자는 취업제한결과 통지시 취업해제조치를 동시에 하도록 요청

-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2) 해임결과의 통보

- 해임을 요구받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함(법 제19조제2항)

16)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말함



나. 처벌

(1) 내용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9조제1호)

(2) 처벌절차

① 고발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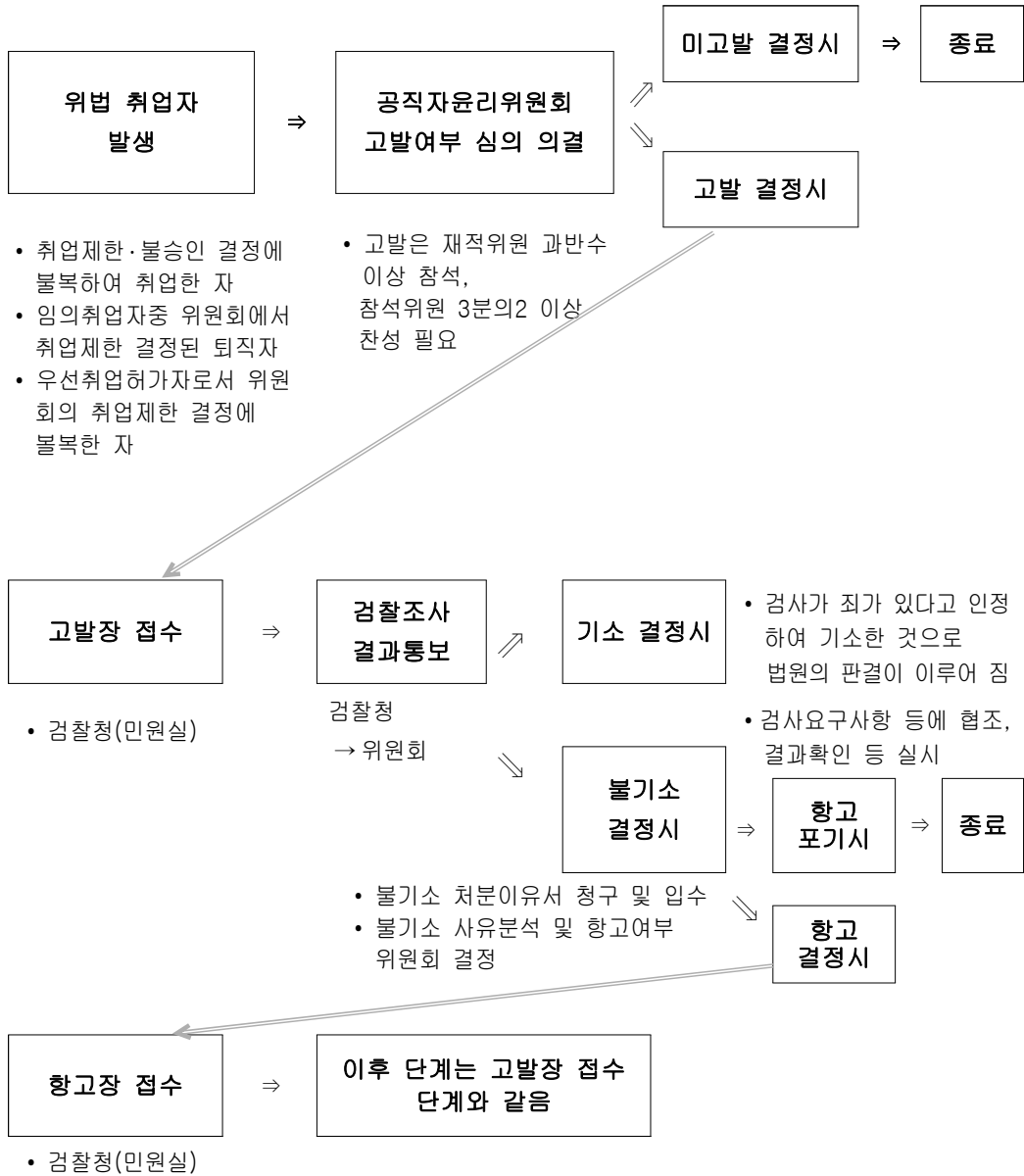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 결정(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영 제19조제2항제4호))
- 임의취업자 또는 우선취업자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인의 고발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함
- 취업제한 결정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위법 취업한 경우에는 위법 취업사실이 확인된 날 이후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함

② 고발사건 처분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소)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는 고발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후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됨
- (불기소) 불기소는 검사의 조사결과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므로 불기소 처분의 경우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



(3) 업무 흐름도





2. 해임요구 불응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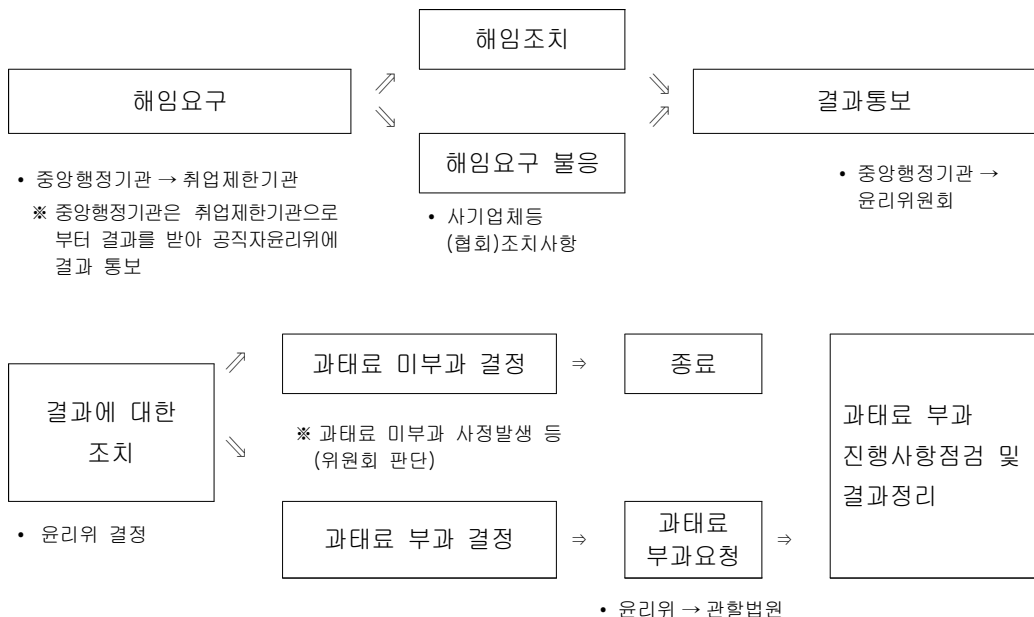
가. 제재내용

-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30조제3항제3호)

나. 과태료 부과 절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법 제30조제4항)
- ※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함
 -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50조(약식재판)

다. 업무 흐름도





V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

1.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및 목적

- 2014.12.30. 공직자윤리법 개정(2015.3.31. 시행) 시 제도 신설
- 목적
 -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간) 이후의 재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자율적 자제를 유도

2.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및 취업현황 조사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하고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9조의4제1항, 영 제35조의6제1항)
- 그 취업이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공시하여야 함(법 제19조의4제1항)

3. 공시하는 항목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과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4. 퇴직공직자의 취업사실 신고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법 제19조의4제2항)

- 그 취업사실 신고는 서면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음(영 제35조의6제3항)

5. 취업사실 신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제3항제4호)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법 제30조제4항)

참고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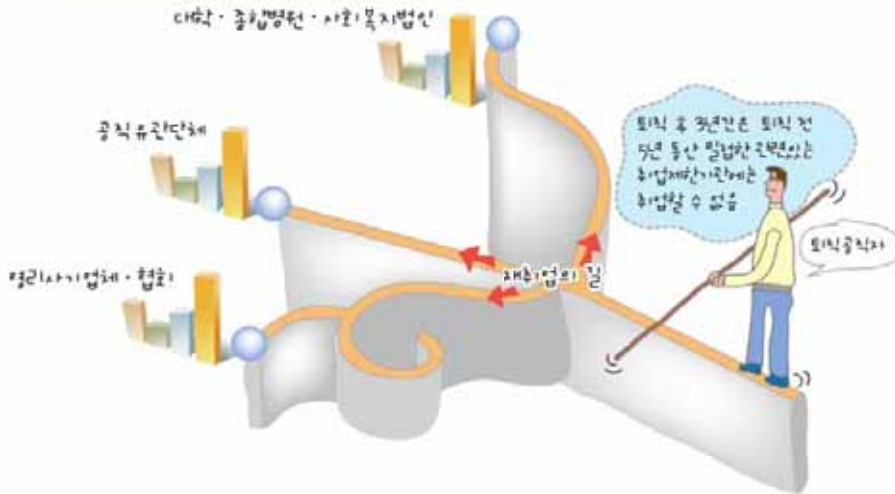
1. 취업이력이 공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 퇴직공직자의 직무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고위공직자에 한해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되며, 그 대상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는 고위공직자와 동일함
- ▶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등과 특정분야 공무원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원이 취업이력공시 대상에 해당됨



<참 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간(15,3,30,이전 퇴직자는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 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모든 공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으며,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차례/Contents





01

취업제한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 취업의 범위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대상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공무원의 경우 보통 4급 이상
- 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의 경우 5~7급 공무원도 해당

제한 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업무관련성 적용구분

- 소속하였던 부서 : 3급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에 적용
- 소속하였던 기관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적용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징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검리 등에 대한 감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감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 법무법인등, 회계사 ⇨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이상 공무원등 재산공개대상자로 퇴직한 자는 해당분야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하여야 함



취업제한 기관

구분	지정기준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협회·조합	영리사기업체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수행기관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제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이외의 비영리 법인

※ 협회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

※ 취업제한기관 조회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취업제한기관 고시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ko.korea.kr/main.jsp>)

취업이력 공시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 대 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 내 용 :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이력을 지정 인터넷
사이트에 매년 2월말 공시
- ※ 위 취업심사대상자는 해당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위반사 제재

-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취업제한 위반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 ※ 병과 가능



02

업무취급 제한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9조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퇴직 후 취급 금지

위반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급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취급금지!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시행령 제35조의3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내용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취급 금지

위반시
제재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정업무(법 제17조제2항 각 호)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용역 또는 물품 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 제출시기 :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승인을 받은 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 ①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② 소속기관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은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음
- 위반 시 제재 : 업무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03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등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 금지!!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4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직공직자 등의 행위 금지!!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5, 제22조제17호, 제23조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내용

재직자 : 재직 중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청탁금지
기관 : 재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알선 금지

위반 시
제재

재직자 : 징계의결 요구
기관 : 시정권고



※ 취업제한 등 위반시 제재사항(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구분	벌칙 징계 및 과태료	위반 내용
취업 제한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기관업무기존 취업심사대상자
업무 취급 제한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기관업무기존 취업심사대상자
행위 제한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심사대상자가 재직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사경권고	■ 소속기관의 장이 재직중인 취업심사대상자를 일정업무와 관련된 취업제한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